

美 개입에 고개 숙인 남북경협…‘속도조절론’ 부상

美 대사관, 방북 기업과 접촉
남북협력 사업 현황 등 확인
한-미, 실무그룹 설치 합의
青 “美, 경협 준비 경고 아냐”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과 북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협력 준비 과정을 놓고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31일로 관측됐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은 일단 미뤄졌고, 앞서 한국을 찾은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청와대를 두번씩이나 찾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국정 기획상황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을 차례로 만나면서 경협 관련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삼성, 현대차, SK, LG 등에 연락을 취해 방북 때 논의됐던 남북 협력 사업 내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지난 3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주변 정원을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간)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비핵화 노력 및 제재이행, 유엔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사업에서 긴밀한 조율을 더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 관련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양국

의 긴밀한 논의를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워킹그룹 성격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더욱 긴밀한 논의를 위한 기구로 안다”며 “비건 대표가 이 일을 맡은 이후 개인 차원을 넘어 좀 더 체계적으로 논

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가 방한해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을 만난 뒤 종합해서 말씀한 것으로 안다”며 “좀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워킹그룹 설치)에 대해 우리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비건 대표의 방문과 주한 미국대사관의 국내 기업 접촉이 비핵화를 전제로 남한이 추진해온 경협 사전 준비에 대해 ‘경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추측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미 국무부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 기간인 29~30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의 한국 카운터파트들을 만났다”며 “이번 방문의 목적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국의 이번 워킹그룹 구성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이번에 취해진 추가 조치는 비건 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연기도 이 같은 분위기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의 방북 움직임과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 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고려해 사안별로 속도 조절을 하는 쪽으로 기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문 계획은 다음 달께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이 시설점검차 방북하는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에) 기본적인 방북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카운터파트 간 북미고위급 회담이 내달 9일(현지시간) 전후로 뉴욕에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임종헌 구속…‘공범 적시’ 양승태 타깃되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9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다량의 문건과 다스 관련자 진술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유죄를 이끌어냈다.

반면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증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지난 4달 간 검사 30명을 수사에 투입해 전현직 판사 80여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협조 역시 요원하다는 입장은 국감 내내 밝혔다. /이법종 기자

임 전 차장의 이같은 진술 거부는 지난 3월 구속 기간 내내 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닮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차례 방문해 설득했음에도 끝내 진술

민군 손잡고 드론·로봇 시장 선점 나선다



방위사업청 국방 분야 시범운용에 지원·활용

드론·로봇산업의 국방 수요 창출과 병력감축 및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민과 군이 손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협의회를 개최해, 드론·로봇 분야 시장의 선점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민간과 군 당국은 드론·로봇산업의 국방 수요 창출, 병력을 대체할 첨단 무인체계의 국방 분야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왔다.

방사청은 “이번회의에서는 드론·로봇 분야 민군협력 방안과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평가했다. 민군협력 방안은 크게 민·군 연구개발 협력 ▲국방 분야 시범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국방 분야 수요 창출 지원 등이다.

민·군 연구개발 협력은 우선 상용 드론·로봇의 국방 분야 시범운용을 적극 지원하고,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드론·로봇을 개발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미래형 드론·로봇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 시범운용 활성화 기반 구축은 정부부처·군,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민과 군의 협력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발과제 공동 기획,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시범운용을 희망하는 각 군의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6년부터 군부대 주요시설과 주변 수색정찰용 시범 운영에 상용화된 멀티콥터형 드론이 활용돼, 군과 공공분야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민간에

서 진행되고 있는 드론·로봇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군에 적극 제공하고, 관련 기업들이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시장을 선점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드론·로봇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현실적 군사요구도는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드론·로봇 산업이 정부가 강조하는 4차산업의 포장지로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군 당국도 장비에 대한 이해, 운용 교리 등 다각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해 봄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주 방사청 기술기획과장은 “드론·로봇은 미래전을 주도할 수 있는 첨단 체계”라며 “앞으로 드론·로봇 분야에 대한 민군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활용될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이전과 실용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철 기자 captinm@

5·18 계엄군 성폭행 17건 확인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가 다수 확인돼 구제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일반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성추행과 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 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한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면담 ▲광주광역시 보상 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으로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거나 5월 19일~21일 광주시내에서 다수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0대~

30대로, 직업은 학생·주부·생업 종사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종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2명 이상의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는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 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과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도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추가 조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법종 기자 joker@

현대로템, 차륜형장갑차 품질개선 팔걷어

기품원 주관 품질개선 협의체 참여

현대로템은 지난 30일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주관한 차륜형장갑차 애전 품질개선 협의체에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차륜형장갑차 애전 품질개선 협의체는 차륜형장갑차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장비의 가동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기품원 주관으로 30일 발족돼 방위사업청, 기품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현대로템 등에 소속된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했다.

차륜형장갑차는 육군 보병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에 대비해 기동성과 생존성

향상을 통한 군 전투력 증강을 위해 도입되는 차량으로 6x6 기본형인 K806과 8x8 보병전투용 K808 두 가지 모델로 분류된다.

이번 협의체는 차륜형장갑차의 애전운용시험 결과, 품질점검 결과, 설계 개선 내용과 차륜형장갑차를 사용하는 군의 의견, 건의사항 등을 토론하고 품질개선 협의체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대로템은 차륜형장갑차의 양산 과정에서도 품질검증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륜형장갑차 주행 및 제동 시험실을 만들어 국방규격에서 요구하는 동력장치 계통의 성능 시험 외에도 가속·제동·후진 능력 등에 대한 별도의 성능 시



현대로템이 납품한 차륜형장갑차 /현대로템

험을 추가로 실시해 품질을 극대화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 2012년 12월 차륜형장갑차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해 2016년 5월 개발을 완료했다. 같은 해 12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50억 원 규모의 초도양산분을 수주했으며 이후 2017년 12월에는 2차 양산분까지 수주해 안정적인 양산체계를 갖췄다. /정연우 기자 ywj964@